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의 딜레마와 해법

정규호

대화문화아카데미 바람과 물 연구소 선임연구원

1. 들어가는 말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민간주체들의 환경파괴행위에 대해 행정 및 법률적 규제와 처벌은 물론 도덕적 비난 또한 상당하다. 환경문제 특성상 그 영향이 시·공간적으로 누적·확산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미친다는 점에서 환경파괴행위의 정당화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환경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처벌은 마땅한 응분의 대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바람직하고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公益) 보장의 책임을 지닌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공공주체들이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그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민간에 의한 문제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정부와 같은 공공주체들이 주도하는 환경파괴행위는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된 데는 공공주체들의 정책 및 제도 형성과 집행을 뒷받침해주는 정당화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실 과거와 달리 시장과 시민사회의 상대적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상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 행사로서 정부가 가지는 권력자

원은 상당정도 약화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민간주체와 달리 정부를 비롯한 공공주체는 공익(公益)을 추구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권력(social power) 행사는 여전히 강력한 것이 현실이다.

공공주체가 주도하는 제반 투자와 개발사업은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이나 ‘국민 전체의 복리향상’이라는 포괄적 정당성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시행하는 정책 및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문제의 상당 부분은 ‘목표달성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혹은 피할 수 없는 부작용’ 정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각종 환경위기 징후들이 빈발하면서 “환경보존 없이는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주장들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성장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정부 역시 환경문제를 환경관련 부처의 소관 업무로 제한시키고 다른 쪽에서는 환경과 괴적인 대형 국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환경과괴속도는 환경보존 노력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이 새로운 발전이념으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균형과 질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성 이념은 민간주체 못지 않게 정부를 비롯한 공공주체들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발주의 시대를 이끌어온 공공계획 및 정책의 정당화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공공정책의 중요한 논리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특성과 이것이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당면하게 되는 딜레마들을 살펴보고 생태정의론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리주의는 오늘날 환경문제의 중요한 해결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정책 및 환경윤리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공리주의적 환경인식 및 실천양식에 담긴 논리적 특성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2. 공리주의의 특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1) 공공정책논리로서 공리주의의 특성

오늘날 공공정책의 중요한 논리적 뒷받침을 제공해주고 있는 공리주의는 중세를 지배하던 종교와 억압적 왕정을 극복하기 위한 계몽주의 운동을 통해 등장하였다. 공리주의는 법과 정치 제도의 급진적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개혁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적 관습과 독단적인 교리들로부터 윤리적 가치판단의 문제를 해방시키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김완진 외, 1996; 임덕준, 1987).

이후 공리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게 된다. 우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척도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며 고통은 유일한 ‘악’이고 쾌락은 유일한 ‘선’으로서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는 동일하며 양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보는 벤담(Jeremy Bentham)의 ‘양적(量的) 공리주의’가 있다(황경식, 1987: 51). 하지만 쾌락과 고통에 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나 모든 개인의 쾌락과 고통은 궁극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벤담의 주장은 공리주의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인간본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쾌락에도 고급쾌락과 저급쾌락이 있고 이들 중 쾌락 전문가들 다수가 선호하는 쾌락이 고급쾌락이라고 보는 밀(John Stuart Mill)의 ‘질적(質的) 공리주의’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질적 공리주의 역시 고급쾌락과 저급쾌락을 구분하는 또 다른 가치기준을 전제함으로써 공리주의 토대를 허물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외에도 공리주의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고 있다.¹⁾

1) 내재적 선(善)으로 오직 쾌락만을 인정하는 ‘쾌락 공리주의’와는 달리 다른 가치

그러나 본래적 ‘ 좋음 ’을 극대화시켜주는 행위가 ‘ 옳다 ’고 보는 극대화의 원리(maximizing principle)를 통해 사회구성원 개인들의 순효용을 모두 합산하여 사회적 총 행복을 도출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공리주의는 쾌락에 대한 정교한 계산가능성을 시도하는 ‘ 합리주의 ’와 사회성원 모두의 행복을 고려하는 ‘ 평등주의 ’, 그리고 개인의 총합의 결과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 결과적 전체주의 ’ 속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공리주의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인간행복에 두고 행복의 원천인 쾌락을 내재적 선이라고 보는 ‘ 쾌락주의 ’(hedonism)적 특성과, 어떤 선택적인 것이나 직관보다는 행위가 산출하는 결과에 행위판단의 기준을 두는 ‘ 결과주의 ’(consequentialism)적 특성, 그리고 사회 전체 행복의 최대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 보편주의 ’(universalism)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임덕준, 1998: 5-6; 윤은영, 1994: 17-25).

문제는 이러한 공리주의의 논리적 특성이 오늘날 공공정책을 구성하는 지배적인 논리와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정책이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정책의 주체가 되어 사회 전체의 공익 향상을 목표로 수행하는 미래지향적인 공식적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공공정책을 구성하는 논리로서 공리주의가 결합되게 된 것은 선호공리주의(preference utilitarianism)의 등장과 더불어서이다. 선호공리주의는 도덕적 ‘ 사실 ’의 불가지(不可知)에 직면하여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실질적이고 경험 가능한 선호를 강조하고 있다(Harsanyi, 1982: 54-55). 따라서 쾌락과 고통이라는 검증 불가능하고 주관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했던 고전적 공리주의와는 달리²⁾ ‘ 선호 ’(preference)라는 관찰 가능한 범주를 비

들도 인정하는 ‘ 다원적 공리주의 ’가 있으며, 선의 극대화의 방식으로 개별행위에 초점을 맞춘 ‘ 행위 공리주의 ’와 행위규칙에 초점을 맞춘 ‘ 규칙 공리주의 ’, 그리고 사회제도의 목표를 전체 선의 총량에 두는 ‘ 전체 공리주의 ’와 사회구성원들의 평균 선에 초점을 두는 ‘ 평균 공리주의 ’ 등이 있다(황경식, 1983: 36-37; 윤은영, 1994: 12-15).

2)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쾌락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하기 힘들며, 쾌락을 측정하기 위한 공통단위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쾌락과 고통에 대한 가치 역시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 결국 쾌

교 척도로 삼은 것이다. 객관적 관찰과 측정 및 이해가능성을 추구하는 실증주의적 영향과 각 개인은 자기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사상의 발전에 힘입은 선호 공리주의는 모든 것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지표로 설명하려는 당시의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정책수립과 집행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공공정책 논리로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된 것이다(김명식, 1996).

공공정책 논리로서 공리주의의 영향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심리적’인 쾌락주의를 ‘공중적’(公衆的)이며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쾌락주의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회적인 제재(制裁)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도 잘 나타난다. 벤담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참 이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중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회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힘을 통해 개인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Bentham, 1948: 24-28). 공리주의는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고통을 수반하는 만큼 원칙상 악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필요악으로 봄으로써 사회적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공권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처럼 공리주의가 공공정책 논리와 연결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정책의 목표는 개인적 욕구의 극대만족에 있으며 총량적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공공정책의 정당성 또한 높아진다고 본다. 따라서 공리주의에서의 ‘공익’이란 상호경쟁적인 다원적 이익들간의 갈등과정을 통해 조정된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익을 초월한 공익은 없으며, 각 개인들의 다양한 특수이익들을 일반이익, 즉 공익으로 전환시키는 데 정책적 함의를 두고 있다.

둘째, 공리주의적 논리에 기반한 공공정책 활동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평가의 초점을 둬으로써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야 어쨌든 개입을 통한

정부 행위는 정당화된다”라는 결과론적 윤리(consequential ethics)를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 수단은 도구적인 가치로 취급되고 수단 선택은 결국 ‘효율성’ 논리에 지배될 가능성이 크다.³⁾

셋째, 공리주의에 기반한 공공정책은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한 의존이 크다. 선호공리주의에 기반한 공공정책에서 정책 주체는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개별행위자들의 선호순위를 집계하고, 그것으로부터 규칙성을 발견하여 가치중립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자’(utility-maximizer)로서 개인의 효용증가를 사회 전체의 효용증가로 연결시키기 위해 개인들의 선호로부터 집합적 선호, 즉 사회복지함수를 도출하는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정책과정에서 정책과학자, 사회공학자의 역할은 증대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정책이 엘리트주의적 특성을 가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사회구성원들간 ‘이익의 인위적 조화’를 강조하는 공리주의의 사회공학적 특성으로 인해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는 고유한 자유주의의 기본 정신과도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김완진 외, 1996: 3-4).

이상에서 보듯 ‘존재’(집단이나 개인의 실질적 선호)로부터 ‘당위’(최대 행복)를 도출하는 공리주의적 전략은 공공정책을 구성·운영하는 중요한 논리적 기반을 제공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현실문제에 대한 가치내재적 또는 가치판단적 활동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항규, 1988; 백완기, 1981).

2) 환경문제에 대한 공리주의의 인식 및 실천논리

20세기 후생경제학과 공공정책에 대한 지식이론으로서 사회 제도와 정

3) 효율성 개념은 목표달성의 객관적 정도를 지칭하는 ‘효과성’과 목표달성을 위해서 각 수단의 실천에 투입될 비용과 이로 인한 목표성취도와의 비율을 지칭하는 ‘능률성’을 모두 포함한다.

책의 정당성과 관련한 포괄적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공리주의가 중요한 현실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공리주의는 환경을 인간 행복의 극대화를 위해 조정되고 통제되는 대상으로 보는 환경인식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의 필요성도 환경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보다는 환경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으로 본다. 환경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은 물론 여가공간과 거주공간을 제공하며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봄으로써, 환경보전의 목적을 우리 인간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증진에 두고 있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인간의 선호와 일치할 때만 환경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인간중심주의적’ 환경관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환경보전에 대한 공리주의의 정당화 논리가 인간선호의 만족을 위한 입장으로 편견지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Kats, 1979: 357).

한편, 공리주의적 사상을 환경윤리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도 있다. 이들은 “중요한 것은 이성을 가지거나 말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에 있다”고 보면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성능력(sentience)을 유일한 도덕적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공리주의를 동물보호운동의 사상적 기조로 활용하기도 한다(Singer, 1994). 쾌락과 고통을 경험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쾌락적 공리주의는 인간 이외의 존재물들도 쾌락과 고통을 경험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인간과 동물이 동등한 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생물중심적 평등주의 사상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유는 인간은 동물보다 고통감수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인간을 보다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며, 식물처럼 감성능력이 없는 존재들은 공리주의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리주의적 인식의 범주를 동물에서 식물과 생태계 전체로 확장시키려는 노력도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의 생태적 확장 노력 이면에는 여전히 행복에 대한 인간중심적 고려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심미적 가치를 제공하며, 생물종 다양성 보존은 우리 인간에게 귀중한 유전적 자원을 제공하고, 산림보존은 산사태와 홍수방지와 같은 편익을 제공하며, 열대우림 보존은 우리 인간에게 귀중한 산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논리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원상태로의 복구가 어렵고, 자연에 대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커지므로, 자연을 보존함에 따른 비용이 파괴된 자연을 새롭게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주장 역시 공리주의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환경문제에 대한 공리주의적 인식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논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오늘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는 후생경제학의 응용분야인 환경경제학적 접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공리주의적 사상이 자리잡고 있다. 현대 환경정책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공리주의는 인간의 복리증진을 정책목표로 하여 시장적 접근을 통한 선호 만족을 지향하고 있다(김명식, 1996: 29). 공리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인들의 선호는 해당 재화에 대해 시민들이 지불하려는 비용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시장가격'이라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후생경제학자들에게서 쉽게 확인되는 주장으로, 시장의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파레토 최적이며, 생산에도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교환 당사자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호혜적이고, 개인 선택의 자유도 존중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희소한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할당하는 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환경보존의 정당성은 곧 경제행위자인 인간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한편, 공리주의적 정책에서는 자연이 비록 복구가 불가능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보고 있으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즉 국민의 총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국민의 총 후생을 극대화하는 공공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비용-편익분석 기법이 폭 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생태계와 같은 무형의 가치를 잠재가격(shadow price) 형태로 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수요는 적지만 미래에는 큰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선택가치(option value)로, 자연이 갖는 고유의 가치는 존재가치(existence value)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경가치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나 인간선호에 반영된 가치측정 모두 결코 쉽지 않은 과제로서 특히 경제가치와 환경가치가 충돌할 경우 단일가치로의 환산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3. 지속가능성 문제의 등장과 공리주의의 딜레마

환경문제를 둘러싼 위기의식이 증폭되면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담은 가치로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에는 개념 자체가 가진 높은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비판 또한 상당하다.⁴⁾ 하지만 지속가능성 개념은 ‘시간적 차원’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로서 ‘세대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공간적 차원’에서 현재 세대에 대한 균형 있는 배려로서 ‘세대 내 형평성’(intragenerational

4) 예를 들어 생태학자들은 ‘지속가능성’을 생태계의 상태와 기능보존의 측면에서 받아들이지만, 경제학자들은 생활수준의 유지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이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상의 오해가 많은 실정이다(Toman, 1992: 15-17).

equity), 그리고 ‘존재론적 차원’에서 인간 이외의 존재물에 대한 배려로서 ‘종간 형평성’(interspecies equity)을 공통의 핵심 원칙들로 가지고 있다.

이들 지속가능성 원칙들에 기반한 새로운 발전전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현세대의 평등한 생존과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기초수요 충족에 일차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며, 기초수요를 넘어서는 소비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자연생태계의 수용능력의 한계를 파괴시키지 않고, 자연자원 특히 대체 불가능한 고갈성 자연자원을 절약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다음과 같은 딜레마들로 인해 지속가능성 문제의 해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 ‘종간(種間) 형평성’ 문제와 공리주의의 인간중심성

데카르트 이후 근대철학은 주로 인간과 인간 이외 존재물들 간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의식(consciousness)을 가진 인간의 질적 우월성을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인간중심성은 공리주의적 사상에도 깊이 내재되어 있어, 자연을 바라볼 때도 자연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험과 느낌, 자연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강조되고 있다. 공리주의는 자연이 인간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며, 자연에 대한 의무도 간접적일 뿐이라고 본다. 결국 공리주의의 이러한 인간중심성은 자연의 존재들이 인간의 이익이나 관심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생물중심주의(biocentrism)⁵⁾자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된다.

5) 생물권 평등주의(biospherical egalitarianism) 혹은 근본생태론자(deep-ecologist)로도 불리고 있는 이들은, 인간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존재물일 뿐이며, 다른 존재물들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 인간의 자연지배 태도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공리주의의 인간중심적 사고는 환경윤리적 차원에서 복잡한 논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흔히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이것을 인간과 다른 생물들과의 질적 구분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도 하나 이성과 언어사용에 미숙한 정신병자나 갓난아이의 경우보다 훈련받은 개가 더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상대편 인간의 말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⁶⁾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공리주의적 환경윤리는 동물 또한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생존과 성장, 재생산과 관련한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이 또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던져주는데, 동물보호의 범역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희귀한 동물의 사육을 위해 수많은 먹이동물을 공급하는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쾌락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나무와 물, 대지 등 자연생태계의 서식지를 보존하지 않고 어떻게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지 등 풀 수 없는 딜레마를 제공한다.

결국 공리주의에서의 환경보전 목적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증진에 두고 있으며, 환경보전은 인간행복 증진의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술개발로 유사자연(類似自然)을 창출하고 인공자연(人工自然)이 인간에게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효용을 제공해준다면 자연생태계 자체의 보존을 계속 주장할 근거를 상실해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공리주의에서의 환경보존논리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며, 환경보존보다 개발이 더 큰 이익을 주고 기술개발로 자연을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환경보존의 정당화 근거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6) 가장 가까운 미래세대라 할 수 있는 태아에 대한 인공유산 문제와 안락사 문제를 둘러싸고도 공리주의적 인간중심주의와 의무론적 생물중심주의자들은 상당한 견해차이를 드러내고 있다(이미영, 1991: 62-70).

2) '세대 내(世代內) 형평성' 문제와 시장의 불완전성

공리주의에 기반한 공공정책논리에서는 시장의 힘에 의한 자율적 조정 기능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특정 지역에 공공투자가 집중될 경우 투자의 효과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주변지역으로 확산된다는 여적효과 이론(Trickle-Down Theory)은 대표적인 정당화 논리로, 공리주의에서 주장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서 '최대행복'이 여적(餘滴)효과를 통해 '최대다수'로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의 기능은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최대행복'이 자동적으로 '최대다수의 행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최대다수의 원리'와 '최대행복의 원리'가 상충할 경우 문제는 복잡한데, '최대다수의 원리'에 강조를 두면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행복이 희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도 흔히 발견된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 문제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편익은 다수가 누리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해당 지역의 소수 주민들이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한편 '최대행복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행복의 총합이 커지는 방향에서 소수의 행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수자의 희생이 약한 경우 소수를 위해 다수의 희생이 정당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황경식, 1987). 공해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면서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처럼 소수의 행복을 위해 그 비용을 다수가 부담하는 경우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형평성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리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은 행복에 대한 동일한 능력, 즉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으며,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체감의 법칙이 작동하여 '최대다수의 원리'와 '최대행복의 원리'는 상보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김용남, 1988: 37). 하지만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의 개념은 '최대행복'이라는 우선적 조건하에서 2차적 의미밖에 안되며, 평등의 문제를 직접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리주의자들이 각 개인들

의 선호가 가장 잘 반영되는 것으로 채택하고 있는 ‘시장가격’ 자체가 상당한 불평등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시장가격은 경제적 지불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의 선호가 중심으로 반영된 것으로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도 경제적 지불능력 자체를 갖추지 못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선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자신의 선호를 능동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비인간적 존재물은 물론 현재 시장의 교환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래세대의 선호도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표현된 선호를 기준으로 한 공공정책은 이러한 불평등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가 있다.

3) ‘세대간(世代間) 형평성’ 문제와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절하

우리가 미래세대를 바라볼 때는 크게 3가지 입장, 즉 “미래세대에 대한 어떠한 도덕적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존재하지만 현재보다는 비중을 덜 차지한다”는 입장, 그리고 “미래의 권리와 이익은 동시대 사람들의 것과 같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Lemons, 1983: 31). 이 중에서 공리주의적 관점은 두번째 입장에 가깝다. 이는 공리주의가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될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쾌락계산에서 벤담이 기준으로 제시한 것들 중에서⁷⁾ 강도(intensity)와 지속성(duration), 확실성(certainty) 그리고 특히 근접성(propinquity)의 측면에서 현재의 필요나 이익을 미래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7) 벤담(Bentham, J.)은 쾌락계산의 7가지 기준으로 두 개의 쾌락 중에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강한 것이 선호된다는 강도(intensity),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가장 오래 지속되는 쾌락이 선호된다는 지속성(duration), 생겨날 가능성이 보다 확실한 쾌락이 불확실한 쾌락보다 더 선호된다는 확실성(certainty), 보다 가까운 쾌락이면 훗날 주어질 쾌락에 비해 선호된다는 근접성(propinquity), 이후에 보다 많은 다른 쾌락을 조장하는 성향을 갖는 쾌락이 선호된다는 다산성(fecundity), 두 개의 쾌락 가운데서 고통과 섞이지 않고 일어나는 쾌락일수록 선호된다는 순수성(purity), 그리고 마지막으로 쾌락을 누리는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일수록 선호된다는 범위(extent)의 기준을 제시하였다(Bentham, 1948: 30).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데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공리주의에서는 미래 가치를 어떻게 할인(discount)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하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이러한 고려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미래세대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기가 힘들며, 이를 계산하는 것 또한 어렵고, 특히 미래세대의 선호체계를 현세대의 선호체계를 외삽(外插)하여 판단하는 것은 현세대의 선호체계에 의해 미래세대의 선호체계가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 선조들의 환경에 대한 낮은 선호의 결과가 현세대가 환경에 높은 선호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만일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미래세대에 물려주면 그들의 선호체계의 우선순위는 환경 이외의 다른 가치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는 규범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공리주의의 경우 시간의 크기(time scale)에 대한 모호한 개념과 시간지평 확장의 어려움으로 미래가치에 대한 적절한 고려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Allison, 1991: 9).

4. 생태정의론적 해법 탐색

1) 지속가능성과 정의의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가능성’ 개념은 현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의 생존과 삶의 질 충족의 공평한 권리를 의미하는 ‘세대 내 형평성’, 이러한 권리를 미래세대로까지 확장시키고자 하는 ‘세대간 형평성’, 그리고 이러한 형평성의 확장 과정이 인간과 자연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종간 형평성’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now), ‘여기’(here), ‘나 자신’(ego)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식의 범주를 시간과 공간,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확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속가능성 개념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형평성 원칙은 ‘정의’(正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리주의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기반한 정의관(正義觀)은 나의 행복추구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지 못하는 형식적 의미의 정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리주의는 기본 가치기준을 최대행복이라는 집합적 결과의 증진에 두면서 사회구성원들 행복의 분배문제, 내재적 불평등성의 문제를 결과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세대내 형평성 문제 해결에서부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Wawrzyniak, 1997). 이와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롤즈의 분배적 정의관은 재화와 편익의 할당과 관련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세대내 형평성 문제 해결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롤즈는 정의의 문제 초점을 주로 현세대 내 인간관계에 맞추고 적절한 분배를 통해 갈등적 주장을 조정하려는 경향이 크다(Almond, 1995: 8). 따라서 롤즈의 정의관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볼 때 자신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이성이나 선택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예를 들어 미래세대나 인간 이외의 존재물들)의 권리주장은 배제될 수밖에 없어 세대간, 종간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정당성의 기반을 시·공간적 맥락에 의존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찾는 포스트모던 계열의 상대론적 정의관도 있는데, 이 경우 지역 자원과 생태계 및 문화적 가치를 소홀히 해온 획일적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넘어 인류 보편의 합의와 행동원칙을 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원칙의 실현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지속가능성 문제는 생태적 사고의 핵심을 이루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harmony)와 ‘균형’(balance)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생태(학)적 정의’에 대한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2) 성찰적 인간주의와 생태(학)적 정의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다름에 있어 크게 대별되는 입장이 공리주의적 인간중심주의와 의무론적 생물중심주의이다. 공리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인간중심주의는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을 제외한 모든 대상은 영혼이 결여된 물리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동물과 식물도 비록 살아 있는 존재이지만 이들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이며 욕구충족적인 자아를 가진 인간중심주의를 강한 인간중심주의로 부르기도 한다. 반면,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 생존과 성장의 권리가 있다고 보는 의무론적 생물중심주의에서는 자연이 실재로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간섭은 현명하지도 도덕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환경보전 전략은 가급적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줄이며 원형 그대로의 자연을 보전하는 데 두고 있다(Pepper, 1989; Engel, 1990).

하지만 이들 두 입장의 상호대립적 관계는 자칫 반자연적 인간중심주의나 인간혐오주의의 양자택일로 빠지게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생물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 모두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존재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점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론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생물중심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역시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과 질적으로 동등하다면 인간에게 다른 생명체들을 존중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자기 자신만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생명체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며 이들로부터 타자에 대한 배려를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인간의 협소한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 확장시키는데 달려 있는 것이다. ‘정의’ 문제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도 이러한 관점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생태적 합리

성⁸⁾에 기반한 성찰적 인간주의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⁹⁾ 이러한 성찰적 인간주의에서는 인간존재와 인간만이 가지는 특질도 결국은 자연진화의 산물이며, 자연은 인간의 현재 모습을 포함한 것이지 결코 인간이 배제된 원초적 자연이 아니고 인간 안에도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가해자고 자연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마저도 극복되어야 하며, 인간과 자연은 모두 현재 인간의 생산과 소비 양식을 지배하는 가치체계와 사회제도의 피해자라 할 수 있다.

또한 성찰적 인간주의에서 보면 오늘날 인간 자체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동시에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인간의 선호체계의 우선순위를 자연스럽게 생태적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생물평등주의나 큰 자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인간만이 실현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세대간’, ‘세대 내’, ‘중간’ 형평성 원칙을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제 해결의 준거로 삼고 있는 생태(학)적 정의는 시간과 공간, 존재론적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전체적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는 차이(difference)를 준거로 형성되는 만큼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물에 대한 차이를 부정하면 형평성 자체에 대한 주장 또한 정당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정의론적 접근은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존재물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켜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지향한다. 동물과 식물 같은 인간 이외의 존재물 자체에도 내재적인 목적과 기능이 있으며 이를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을 풍요성(flourishing)이라 부른다면(Pence, 1991), 지속가능성의 실

8) 드라이젝(Dryzek, J.)은 현재적 가치에 매몰되어 미래를 고려하지 못하는 ‘전략적 합리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사회의 생명유지체계를 얼마나 잘 유지시켜주는가를 기준으로 한 ‘생태학적 합리성’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1995: 66-70).

9) 이러한 ‘성찰적 인간주의’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강한 인간중심주의’와 대비하여 ‘약한 인간중심주의’, ‘방법론적 인간중심주의’, 또는 ‘생태적 인간주의’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문순홍, 1992: 69; Dobson, 1993: 82).

현은 생태(학)적 정의의 관점에서 수많은 생물종들과 자연생태계 자체가 가진 ‘다양성’, ‘항상성’ 그리고 ‘총체적 특성’이 결합된 질적 풍요성을 미래세대로 확장시켜나가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환경문제를 통해 제기되는 지속가능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 공리주의적 접근방식은 여러 모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문제 역시 정책결정자들 개인의 윤리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것 못지 않게 이들이 기반하고 있는 가치 및 지식 체계로서 공공정책의 정당화 논리를 구성하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환경문제가 지속가능성 문제로 전환하게 된 데는 ‘생태적 한계’(ecological limits) 개념에 기반한 현대 사회체제의 진단에 영향받은 바 크다. 생태적 한계에는 자연자원의 매장량과 자연생태계의 오염물질 처리 및 동화 능력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 정도(규모와 속도 등)를 능가하는 문제 해결능력 및 필요자원의 양(재원, 인력, 시간 등)을 결정하는 사회제도적 차원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공리주의적 인간중심주의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연자원의 대체가능성과 생태적 수용능력의 탄력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토대로 하여 생태적 한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태적 한계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엔트로피 증가를 억제하고 자연생태계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장억제론, 반성장론을 강조하는 생물중심주의와는 다르게 공리주의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을 통한 인간의 관리능력 확장을 문제 해결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정의론적 접근에서는 생태적 한계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세대 내와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수용능력(social carrying capacity)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중심의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장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의 제도와 가치체계로부터 시간과 공간,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키려는 성찰적 노력을 통해 선호의 우선순위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간 형평성 원칙의 실현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자연계의 생태적 권리에 대한 대변자적 역할을 촉진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환경문제는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인 만큼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선호의 총합 논리로는 한계가 있다. 가치는 간주관적인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적 규범성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개인주의적인 선호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처방의 타당성은 폭 넓은 토론과정을 거쳐 검증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선호에 기반하여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다. 물론 생물중심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자신의 선호와 욕구를 표출하지 못하는 자연생태계의 생물종들이 현재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생태(학)적 정의’의 정립을 위해서는 자연생태계의 보존 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변자적 계획가와 후견인 역할의 활성화를 통하여 동물과 식물 등 귀중한 생태적 존재물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마치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인들의 법률상의 권리를 부모나 친지가 대행하는 것처럼, 자연생태계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할 후견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생태정의론적 입장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간의 담합행위를 막는 데도 중요하다.

또한, 세대 내와 세대간 형평성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생태적 교육을 통해 변화된 선호체계를 정책결정 과정에 적절히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생태학적 인식의 변화에는 우주에서 바라본 자그마한 푸른 행성

인 지구에 대한 사진이나 멸종위기의 동물사진, 고래학살 장면을 담은 사진, 환경오염의 피해를 다룬 관련자료,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다룬 각종 통계자료 등이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실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와 자신의 경험과 가치체계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스스로의 선호체계를 변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 사실에 대한 충분한 자각을 하기 이전의 선호들을 있는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이며, 따라서 정책 이슈를 둘러싸고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선호체계를 성찰하는 과정이 활발한 만큼 해당 정책의 의사결정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생태(학)적 정의는 공리주의적 인간중심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이 처한 삶의 조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지속가능성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줄 것이다.

정규호 ecosociety@hanmail.net

참고문헌

- 김명식. 1996, 『환경윤리에 관한 연구: 공리주의와 생명중심주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완진·송현호·이재율. 1996, 『공리주의·개혁주의·자유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용남. 1988, 『Bentham의 쾌락적 공리주의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항규. 1988, 『정책가치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공리주의이론과 Rawls 정의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순홍. 1992,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 나라사랑.
- 백완기. 1981, 『정책결정에서 공익의 문제』, 《한국정치학회보》 제15집.
- 윤은영. 1994, 『J. S. Mill의 공리주의에 반영된 윤리적 쾌락주의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영. 1991, 『도덕적 선택의 근거에 대한 의무론과 공리주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덕준. 1987, 『행위공리주의에 대한 옹호: J. J. C. Smart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경식. 1983, 『고전적 공리주의와 J. Rawls의 정의론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87,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문학과지성사.
- Allison, L. 1991, *Ecology and Utility: the Philosophical Dilemmas of Planetary Management*, Leicester University Press.
- Almond, B. 1995, "Rights and Justice in the Environment Debate," in David E. Cooper and Joy A. Palmer(eds.), *Just Environments: Intergenerational, International and Interspecies Issues*, London: Routledge.
- Bentham, J. introduced by L. J. Lafleur. 1948,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Registration*, Hafner Pub Co.
- Dobson, A. 저, 정용화 역. 1993, 『녹색정치사상』, 민음사.
- Dryzek, J. 저, 최승 외 역. 1995, 『환경문제와 사회적 선택: 정치, 경제, 생태론』, 신구문화사.
- Engel, J. R. 1990, "The Ethic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J. R. Engel(ed.), *Ethics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Global Change, International Response*, Arizona University Press.
- Harsanyi, J. C. 1982, "Morality and Theory of Rational Behavior," in A. Sen and B. Williams(eds.), *Utilitarianism and Beyo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ts, E. 1979, "Utilitarianism and Preservation," *Environmental Ethics*, Vol. 1.
- Lemons, J. 1983, "Atmospheric Carbon Dioxide: Environmental Ethics and Environmental Facts," *Environmental Ethics*, Vol. 5, p.31.
- Pence, G. 1991, "Virtue Theory," in P. Singer(ed.), *A Companion to Ethics*, Oxford: Blackwell.
- Pepper, D. 저, 이명우 외 역. 1989, 『현대 환경론: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 철학적·민중론적 이해』, 한길사.
- Singer, P. 저, 황경식·김성동 역. 1994, 『실천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 Toman, M. A. 1992, "The Difficulty in Dealing Sustainability," *Global Development and Economic Space*, Transition Books.
- Wawrzyniak, J. 1997, "The Dark Side of Utilitarianism," Presented Paper on Environmental Justice, October 1-3 Melbourne, Australia.